

# 코로나 위기극복과 수요진작 정책\*

장인성\*\*

## I. 머리말

외환 및 금융부문으로부터 시작되어 실물부문으로 파급된 과거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와 달리 이번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위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갑작스런 내수의 위축에서부터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대규모 감염의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가계의 전반적인 대외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음식숙박업, 관광 및 여행업, 스포츠 여가 산업, 교육서비스업 등 내수서비스업 전반에 급격한 수요 충격이 발생하였다.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급격히 둔화함에 따라 수출 감소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되면 제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남길 경제적 충격의 여파는 현재로서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수부양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충격을 입은 많은 나라에서 대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확장재정 편성 등 공격적인 내수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와 같이 기본적인 세계 경제의 여건도 녹록지 않아 향후 수출주도의 경기회복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수진작 정책은 단순한 일과성 위기대응 정책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과정을 반추해 보면 현 시점에서 내수확대 정책은 단순한 위기대응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과거 수출주도 고도성장기의 기본적인 사고는 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것이었다. 투자는 생산에 투입되어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반면, 소비는 파이를 먹어 치워서 성장을 늦추는 역할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고착되다시피 한 이유

\* 이 글은 장인성(2019), 『낙수효과의 측정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ijang@kli.re.kr).

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고도성장이 본격화되기 전 1960년대 우리나라는 축적된 자본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 여력도 충분치 않아 성장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해외로부터의 차관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산업자본 형성을 위해 소비를 억제하고 최대한 투자자금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경제개발이 수출주도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수출 부문의 생산물 소비는 해외시장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서는 소비 없는 생산 확대가 가능했다. 이 시기의 성장을 주도한 부문이 제조업이라는 사실도 생산 확대에 필수적 전제인 소비수요 확대를 해외에서 찾는 것이 가능하게 한 요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위한 투자의 확대 재생산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물론 확대된 투자자금의 소유는 수출대기업으로 귀속되므로 부의 소유는 편중된다. 산업적으로 볼 때도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과 같이 산업화 초기에는 제조업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농업 등 기타 산업과의 생산성 격차 확대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파이의 증가 속도가 컸고, 그로 인한 절대적 소득 증가라는 보상이 각 계층에 이루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본원적 축적을 원활하게 하는 메커니즘이었던 정경유착 및 독재, 불평등 심화에 따른 불만 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체제가 장기간 유지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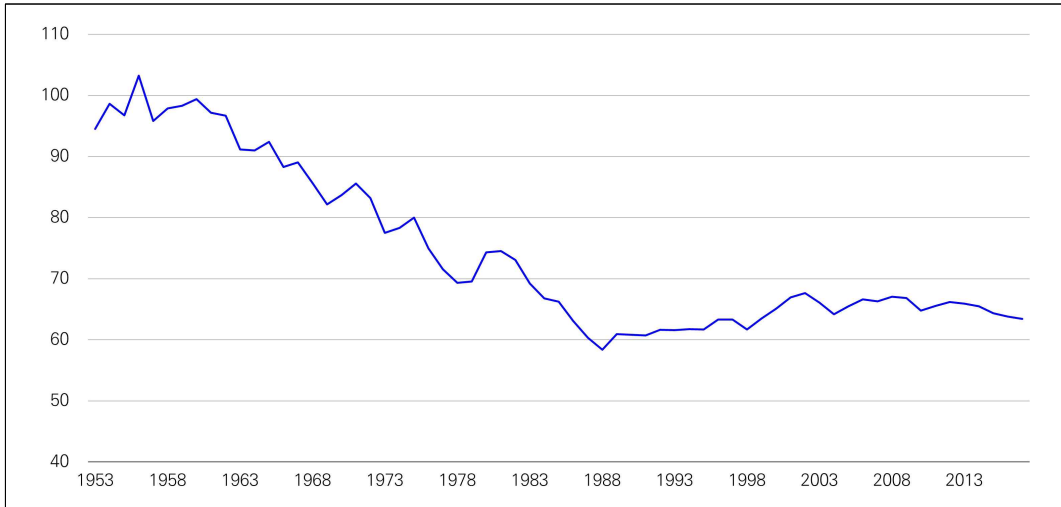
수출주도체제하에서 경시되어 온 소비수요는 수출이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에만 불황 탈출을 위한 단기적 경기진작 정책의 일환으로 주목받곤 하였다. 특히 그러한 내수수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부동산 수요 등 건설수요였다. 부동산 수요는 건설투자 등에 대한 직접적 파급효과로 인해 경기를 부양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SOC 건설의 포화 상태, 주택 및 부동산 개발의 한계와 가계부채의 급증 등으로 인해 그러한 건설투자 역시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요 확대를 이끌 여지도 크지 않다. 앞으로는 가계의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수확대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 II. 소비지출 비중의 변화와 성장 기여도 하락

우리나라의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최종소비지출의 비중은 1956년 103.2%에 달했다. 1950년대 소비지출이 GDP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투자 비중이 10% 내외로 낮은 가운데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순수출이 음으로서 양의 투자와 거의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수입초과로 인한 이와 같은 높은 소비지출 비중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며 1960년대 이후 고도

[그림 1] 최종소비지출의 명목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OECD, <https://stats.oecd.org>

성장과 수출 및 투자 급증에 따라 최종소비지출의 비중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8년 58.4%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다시 다소 증가하여 2017년 63.4%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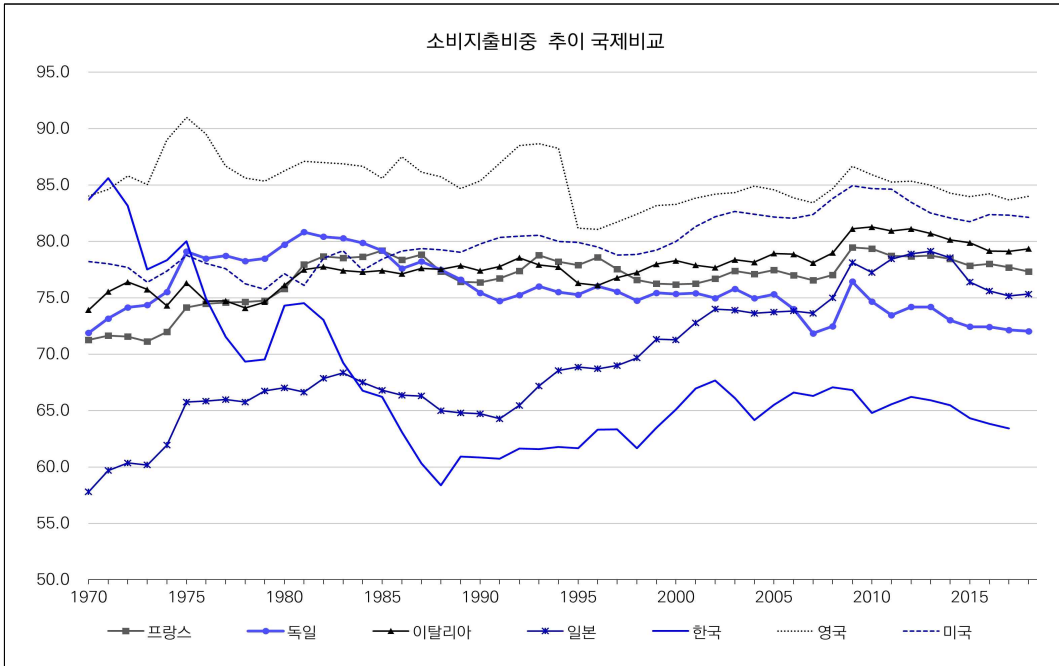
[그림 2]에서 보듯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최종소비지출 비중은 여전히 여타 선진국에 비해 10~20%가량 낮다. 물론 선진국 간에도 소비지출의 비중은 국가별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수출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독일의 소비지출 비중이 72%로 낮은 편이며, 영국과 미국은 85%에 근접한다. 우리와 유사한 고령화 문제와 성장둔화를 경험한 일본은 1970년 중반 무렵 소비지출의 비중이 60% 내외로 낮았으나 이후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7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경험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소비지출 비중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한편 성장률에 대한 소비지출 증가율의 기여도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표 1>과 같이 각국의 기여도 변화에서 공통적인 추세는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2010년대의 연평균 기여도는 일본이 55.6%로 가장 낮고 우리나라가 61.5%로 그다음으로 낮다. 일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지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1970년대 72%에서 2000년대 34.5%까지 하락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소비지출 기여도는 2010년대 연평균 68% 수준이며 영국과 미국은 각각 78%와 76%로 높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해왔으며, 선진국과의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투자 및 수출확대가 성장에 중요함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림 2] 명목GDP 대비 최종소비지출 비중 추이 국제비교(1970~2018)

(단위: %)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

<표 1> 성장(명목GDP 증가율)에 대한 소비 기여도 국제비교

(단위: %)

|      | 1971~1980 | 1981~1990 | 1991~2000 | 2001~2010 | 2011~2018 |
|------|-----------|-----------|-----------|-----------|-----------|
| 프랑스  | 76.8      | 77.7      | 87.9      | 72.8      | 68.1      |
| 독일   | 89.4      | 72.7      | 78.9      | 66.1      | 67.6      |
| 이탈리아 | 78.3      | 78.2      | 80.3      | 81.1      | 71.8      |
| 일본   | 72.2      | 63.7      | 47.7      | 34.5      | 55.6      |
| 한국   | 74.0      | 57.8      | 82.7      | 67.4      | 61.5      |
| 영국   | 89.2      | 86.2      | 90.8      | 80.8      | 78.4      |
| 미국   | 77.4      | 86.5      | 80.8      | 91.2      | 75.8      |

자료: OECD, <https://stats.oecd.org>.

선진국의 평균을 웃도는 증가율을 무한히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소비지출 비중 및 성장 기여도는 앞으로 성장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부문이 내수부문을 입을 시사한다. 또한 내수시장의 확대는 국민들의 소비 확대 및 효용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Ⅲ. 소득계층별 소비성향과 내수진작

#### 1. 계층별 소비성향의 차이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계소비의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최종소비지출의 3/4가량이 민간소비지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은 내수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급대상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소득 및 재산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와 시간의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원의 시급성이 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수요진작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볼 때 후속 지원정책은 효과성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위기 시 저소득층이 타격을 가장 크게 입어 지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점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소비촉진의 관점에서 소득계층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첫째는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을 때 소득계층별 효용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소득과 소비의 절대 규모가 작아 동일 소비량의 한계효용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효용이 더 높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한계소비성향이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에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재난지원금 등의 수요진작 정책이 소비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소비촉진 효과에 더 효과적이다. 물론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용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사용처도 제한되어 있어 소득계층에 무관하게 대부분 소비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는 대체효과가 존재하므로 재난지원금을 소비한 만큼 다른 소득으로부터의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가계의 최종소비 증가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작을 수 있다.

현대 경제학이론은 소비가 단순히 현재 소득만이 아닌 평생의 기대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즉, 현시점에 가계 주체에게 알려진 현재 소득과 예견된 미래 소득, 그리고 기타 현시점의 거시변수에 대한 정보는 가계의 소비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소득 혹은 자산 변화만 가계의 소비 변화를 초래한다. 물론 이는 유동성 제약이 없고 미래의 위험에 대한 보험시장이 완전하다는 가정을 필요로 하며, 실증분석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동안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및 제약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주로 가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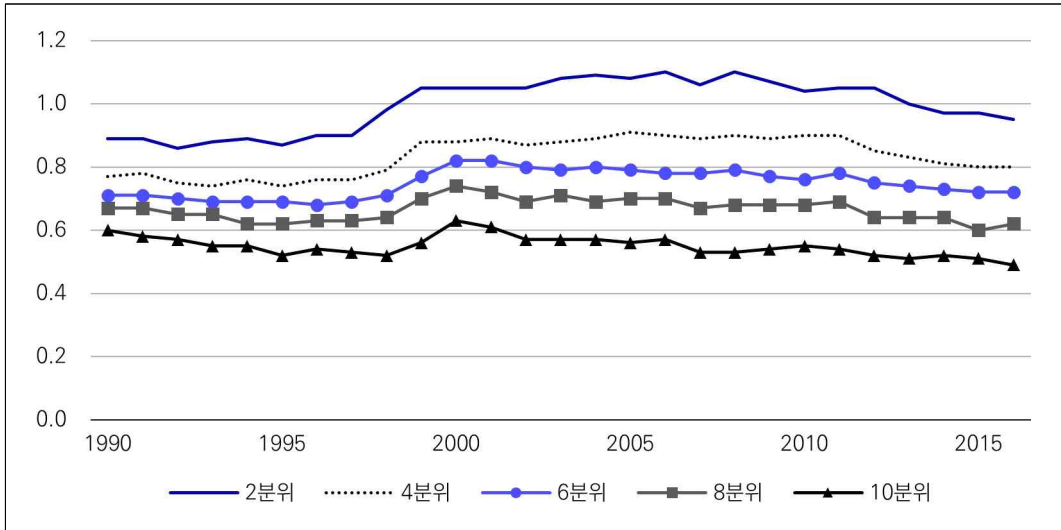
함수 측정을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임병인·윤재형(2014)은 1990~2014년 가계동향조사 분기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선형소비함수의 분기별 측정을 통해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미래 소비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파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소비회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Park(2017)은 한국노동패널 2000~2014년 자료를 토대로 Blundell et al.(2008)과 Kaplan and Violante(2010)의 방식에 따라 일시적 소득 충격에 대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하였다. 특히 그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은 많으나 현금 등의 유동자산이 적은 부유한 유동성 제약 가계의 소비성향에 초점을 맞춰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이들의 한계소비성향이 유동성 제약이 없는 가계에 비해 높아 외부충격 발생 시 거시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비성향에 대한 보다 최근의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고 있다. 서현덕(2017)이 2012~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시행한 평균소비성향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자산의 한계소비성향은 하락하지 않은 반면 소득3~5분위의 소비성향이 하락하여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저자는 이러한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이 국내수요 부진으로 이어지는 한편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ong(2018)은 2012~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변화가 양(+)/음(-)일 때 가계소비의 비대칭적인 변화를 측정하였다. 유동성이 부족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다른 가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가운데 양의 소득 변화가 발생 한 가구의 소비 변화가 음의 소득 변화가 발생한 가계에 비해 더 작았다. 특히 부채가 많고 유동성이 작은 가계는 음의 소득 변화에 대해 소비의 변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 2. 10분위 소득계층의 평균소비성향 변화 추이

본고에서는 먼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여 10분위로 나눈 소득계층의 분기별 소득과 소비, 그리고 평균소비성향의 1990~2016년 기간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큰 것은 시기와 무관하게 일관된 현상이며, 소득분위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소비성향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1년까지 소비성향 증가와 2011년 이후의 소비성향 하락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추세이다.

[그림 3] 균등화가처분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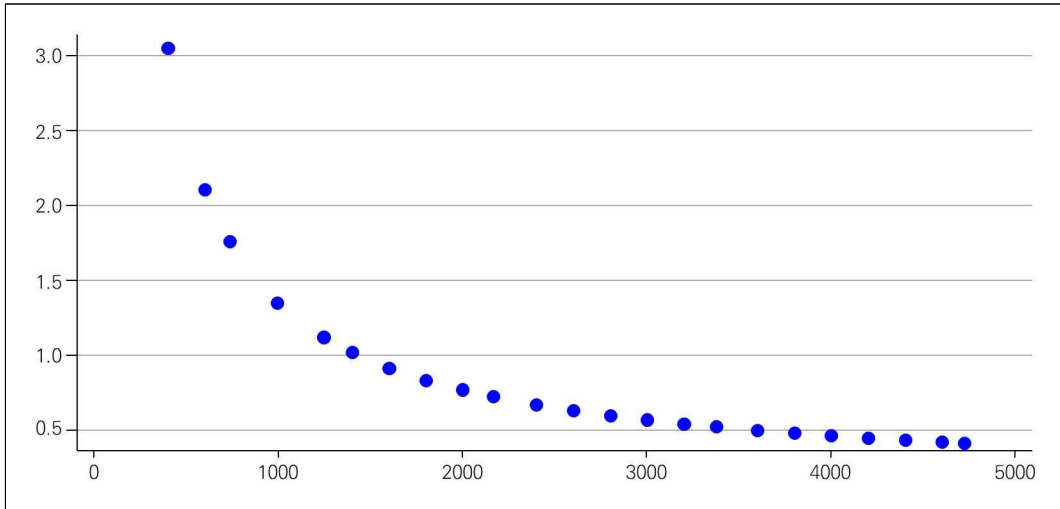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

그러나 구체적으로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1990~2016년 전체 기간을 통틀어 볼 경우 소득분위별 소비성향의 격차가 더 커졌다. 소득1분위의 소비성향 대비 소득10분위의 소비성향은 1.8배에서 2.5배로 증가했다. 10분위 대비 2분위의 소비성향도 1.48배에서 1.93배로 증가했다. 특히 평균소비성향이 가장 낮은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 소비성향의 장기적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다. 1990년의 0.60에서 2016년 0.49까지 하락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의 소비성향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다. 그와 반대로 평균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소득1분위의 소비성향은 동 기간 1.08에서 1.24로 증가하였다.

둘째, 2010년 이후로 국한하면 저소득분위의 소비성향 하락이 고소득분위보다 더 크다. 소득 1분위의 2016년 소비성향은 1.24로서 가장 높았던 2010년의 1.49에 비하면 0.25 감소하여 모든 소득분위 가운데 가장 큰 소비성향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다른 소득분위에서도 나타나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감소폭이 대체로 더 크다.

가계의 소비성향을 측정할 때는 표본규모가 충분하고 자산과 소득에 대한 자료가 정확해야 한다. 가계동향조사는 자산에 대한 정보가 없고 소득과약도 불완전한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표본규모가 2만 가구로 여타 가구 서베이에 비해 크고 최근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신뢰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횡단면 가계의 소득-소비 프로파일을 추정하였다. 이하에서는 가구의 균등화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비교해본다. 10분위 분류 시에는 모집단의 소득분위를 반영하기 위해 가구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그림 4] 소득수준별 평균소비성향 추정치



자료: 횡단면 소비지출 결정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의 평균값과 중앙값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평균  | 1.66 | 0.96 | 0.86 | 0.77 | 0.68 | 0.61 | 0.57 | 0.51 | 0.46 | 0.38 |
| 중위값 | 1.07 | 0.86 | 0.80 | 0.72 | 0.65 | 0.58 | 0.54 | 0.48 | 0.43 | 0.37 |

균등화가처분소득 수준별로 평균소비성향을 추정해본 결과 연령, 교육수준, 직업, 주거형태, 순자산액, 유동성 제약 등 기타 설명변수를 중위값으로 고정했을 때 [그림 4]와 같이 중위 균등화가처분소득인 2,166만 원에서 평균소비성향은 0.65로 나타났으며, 균등화가처분소득 25퍼센타일인 1,246만 원에서는 0.93, 75퍼센타일인 3,377만 원에서는 0.5, 그리고 10퍼센타일과 90퍼센타일에서는 평균소비성향이 1.13과 0.43 수준이었다. 이는 회귀분석을 통하지 않고 단순히 분위별 가구의 소비성향을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여 평균한 <표 2>의 값과 거의 일치한다.

### 3.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의 측정

평균소비성향만으로 현재의 소득에서 추가적인 변동이 발생했을 때 가계가 얼마나 소비를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한계소비성향의 추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패널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7년과 2018년 자료를 활용해 소득과 소비의 차분값을 구하여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다. 소득 변화에 대한 소비 변화를 추정하는 회귀식의 설명변수는 균등화가처분소득과 순자산의 차분값 외에도 가처분소득수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일한 가처분소득 증감량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 증감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계소비성향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차분변수의 회귀식에는 설명변수로

〈표 3〉 차분변수를 이용한 한계소비성향 회귀분석

|                          | Coef.         | t     | P>t  |
|--------------------------|---------------|-------|------|
| 순자산 증감                   | 0.0048 **     | 7.16  | 0.00 |
| 균등화가처분소득 수준              | -0.0144       | -1.90 | 0.06 |
| 균등화가처분소득 수준*균등화가처분소득 증감  | -0.0000086 ** | -3.33 | 0.00 |
| 균등화가처분소득 증감              | 0.1052 **     | 9.93  | 0.00 |
| 균등화가처분소득 증감 <sup>2</sup> | -0.000012 **  | -3.32 | 0.00 |
| 가구원 수                    |               |       |      |
| 2명                       | -47.40 *      | -2.42 | 0.02 |
| 3명                       | -45.67 *      | -2.07 | 0.04 |
| 4명                       | -87.52 **     | -3.67 | 0.00 |
| 5명                       | -21.16        | -0.71 | 0.48 |
| 6명                       | -115.73 *     | -2.10 | 0.04 |
| 7명                       | -317.91       | -1.89 | 0.06 |
| 8명                       | -537.27       | -1.31 | 0.19 |
| 9명                       | 36.59         | 0.13  | 0.90 |
| 연령                       | -8.93 **      | -3.57 | 0.00 |
| 연령 <sup>2</sup>          | 0.066 **      | 2.93  | 0.00 |
| 혼인상태                     |               |       |      |
| 배우자 있음                   | 70.60 *       | 2.78  | 0.01 |
| 사별                       | 24.91         | 0.96  | 0.34 |
| 이혼                       | 20.03         | 0.79  | 0.43 |
| 소득분위                     | 14.24         | 0.67  | 0.51 |
| 2분위                      | 30.74         | 1.33  | 0.18 |
| 3분위                      | 27.61         | 1.11  | 0.27 |
| 4분위                      | 39.82         | 1.50  | 0.13 |
| 5분위                      | 28.73         | 1.01  | 0.31 |
| 6분위                      | 65.29 *       | 2.10  | 0.04 |
| 7분위                      | 85.28 *       | 2.50  | 0.01 |
| 8분위                      | 121.95 **     | 3.14  | 0.00 |
| 9분위                      | 153.21 **     | 2.87  | 0.00 |
| 상수항                      | 306.61 **     | 4.84  | 0.00 |
| Number of obs            | 6,746         |       |      |
| Adj R-squared            | 0.0397        |       |      |

주 : \*, \*\*는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

서 균등화가처분소득의 수준값, 그리고 수준값과 차분값의 곱을 포함한다. 그밖에 가구원 수, 연령, 혼인상태, 그리고 소득분위가 설명변수에 포함되었다. 순자산의 차분값이 포함된 상태에서 기타 자산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외되었다. 종속변수는 균등화소비지출의 차분값이다.

회귀분석 결과 순자산 증가는 예상대로 소비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균등화가처분소득의 증가도 소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가구원 수가 균등화소비지출 증가에 음의 영향을 준 것은 가구균등화가 다소 과도하였음을 시사한다. 6분위소득 이상 가구일 경우 소비의 증가가 더 많았는데 이는 설명변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소득분위 간의 자산이나 기대소득의 변화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본 회귀식은 수준변수를 사용한 횡단면 소득-소비 프로파일과 달리 차분변수를 사용하였으므로 소득변수의 계수가 한계소비성향이 아니다. 즉, 소득의 증감에 따른 소비의 증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변화분의 증감에 따른 소비변화분의 증감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은 소비증감분의 예측값(fitted value)을 소득증감분으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한계소비성향이 단순히 소득증감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도록 허용하기 위해 회귀식에 균등화가처분소득의 수준변수를 포함시켰으므로 한계소비성향, 즉 소비지출변화분/가처분소득변화분의 값은 균등화가처분소득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기타 설명변수를 중위값에 고정시키고 균등화가처분소득이 증가했을 때 각 소득수준별 한계소비성향을 계산한 결과 균등화가처분소득의 중위값에서 한계소비성향은 0.76, 소득 10퍼센타일에서 1.13, 90퍼센타일에서 0.39로 나타났다.<sup>1)</sup> 소득 상위 10% 수준의 가구는 평균 수준의 가구에 비해 소비성향이 절반 가까이 낮은 것이다.

## IV. 맺음말

경제는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때 정책입안자는 누가 무엇을 더 생산하고 무엇을 더 소비할 것인가에 대해 산업정책이나 재정정책 등을 통해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출주도의 고도성장기에는 투자와 수출의 확대에 유리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수출제조업의 성장

1)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이나 한계소비성향이 10이 넘는 것은 서베이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으로서 이들의 소비가 해당 연도의 소득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는 소득1분위 가구 가운데 자산에 비해 소득이 낮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높아 이들의 자산소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과 일시적으로 소득이 하락한 가구의 비중이 높아 생애소득 혹은 항상소득에 따른 소비평활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등을 시사하는 것이다.

속도는 둔화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선진국 평균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성장에 따른 선진국과의 임금격차 축소, 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기술 선도 단계 진입 등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력이나 모방에 의존한 발전 속도의 보너스가 점차 사라지는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면 내수와 서비스산업이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더 커지게 된다. 내수부문의 특징을 고려하면 이는 곧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제는 우리의 총수요가 어떠한 구조를 갖느냐가 성장의 속도뿐만 아니라 성장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기로에 서 있다.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수산업의 수요를 누가,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이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가 하는 문제와도 통한다. 단순히 시장에 맡기기에는 수출대기업과 내수서비스업 간의 격차가 큰 우리나라의 현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구조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부문간, 기업규모간의 임금격차는 소득분배의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내수부문의 고른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즉, 수출산업의 성장과 달리 내수 성장은 소비와 직결되어 있으며 누군가 소비하는 만큼만 성장할 수 있다. 물론 내수부문의 투자 역시 성장에 기여하지만 이 역시 소비의 증가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만약 시장기능에만 맡겨둔다면 결국 소비여력이 큰 고소득층의 소비 촉진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 문제는 내수서비스 부문에서 고소득층의 소비를 유발하려면 교육이나 의료 등에서 서비스의 공공성 훼손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고급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허용한다면 서비스산업은 더 성장하겠지만 ‘소비의 계층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수출대기업과 내수서비스업 간의 수익성이나 임금수준의 양극화가 소비의 계층화를 매개로 교육이나 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부문 내의 양극화로 귀결된다면 사회 전반의 양극화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대로 사실 소비의 한계효용과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따라서 경제위기에 대응한 소비진작은 물론 장기적으로 내수산업의 발전에도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낮은 소득으로 인해 소비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이 문제이다.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의 구조적 양극화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비진작 정책이며 내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확장재정의 편성 시 저소득층의 높은 한계소비성향을 활용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세계개편 등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KLI]**

[참고문헌]

- 서현덕(2017), 「최근 국내 가계 평균소비성향 감소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 35(3), pp.75~105.
- 임병인·윤재형(2014), 「우리나라의 단기소비함수 및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 추이 비교분석」, 『산업경제연구』 27(2), pp.585~605.
- Blundell, Richard and Luigi Pistaferri, and Ian Preston(2008), “Consumption Inequality and Partial Insurance,” *American Economic Review* 98(5),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pp.1887~1921.
- Kaplan, Greg and Giovanni L. Violante(2010), “How Much Consumption Insurance beyond Self-Insurance?”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2(4),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pp.53~87.
- Park, Ki Young(2017), “The Wealthy Hand-to-Mouth Households in South Korea,” *Global Economic Review* 46(3), pp.229~324.
- Song, Sang-yoon(2018), “Leverage, Hand-to-Mouth Households, and MPC heterogeneity: Evidence from South Korea,” BOK Working Paper No.2018-21, Bank of Korea.